

“구태정치 그림자” vs “초딩 전쟁게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안철수 대표의 바른정당 통합 추진 및 '179명 무더기 징계'와 민주평화당 창준위의 창당발기인대회로 국민의당 내 갈등이 악화일로로 걷고 있다.

양측이 29일 서로를 원색 비난하며 진흙탕 설전을 펼친 가운데, 사실상 통합 찬반파가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 대표의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민주평화당 창준위 측을 향해 “국민적 열원인 동서 평화당 창준위의 창당발기인대회로 국민의당 내 갈등이 악화일로로 걷고 있다.”

그는 “통합을 저지하려는 분들이 별도 정당을 만들겠다고 기어오르는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179명 무더기 징계 등 갈등 악화일로...이혼서류 도장 찍었다는 평가도 증재파 “통합 지지 명분 약하고 평화당 확신 없어”

을 넘어 발기인대회까지 강행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치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이어 “당의 기강 확립 차원에서 당우위를 통해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고 발언. 자신의 '179명 무더기 징계'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안 대표 측은 아울러 이날 최고위에서 김삼화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민주평화당 창준위 측의 당비 대납의혹 진상조사단 구성을 의결했다.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29일 4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기 위해 당비를 대납으로 대납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갑질싸움의 연장선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민주평화당 창준위 측도 안 대표에 대해 공개 비난을 이어갔다. 조배숙 창준위원장은 “헤어지는 마당에 덕담은 기대하지 않았지만 뒤끝이 유치하다고 안 대표의 징계와 진상조사단 구성을 비난했다. 그는 또 창당발기인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이상돈 전당대회 의장 징계를 거론하며 “전무후무한 코미디”라고 혹평했다.

역시 창준위에 참여하고 있는 장병안 의원은 “안 대표가 대화와 협상을 통한 정치의 본령과 거리가 먼 제왕적이고 독선적인 당 운영 모습을 보여줬다”며 “이는 본인의 협담함을 먼 후대까지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것이다.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초딩이 전쟁게임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게 아닌가”라고 맹비난했다.

전당대회 사회권을 박탈당한 이상돈 의원은 “뻔뻔한 안철수식 정당 파괴 사태에 눈을 감으면 안 된다”고 법원의 전당대회 개정 당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을 호소한 뒤 “헌법기관인 의원 개개인의 당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원들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건 정당과 의회정치를 파괴하는 쪽”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또 “안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과 유승민 대표가 이끄는 바른정당이 뭐가 되겠나”라며 “화계장터에서 동서화합 축제를 기획한다는 데 유 대표는 TK(대구·경북)를, 안 대표는 호남을 배신하고 능욕했다. 두 배신자가 모여 만든 정당이 동서화합은커녕 무엇을 할지 의심된다”고 통합신당을 혹평했다.

한편 그간 통합 찬반파 사이에서 고심하던 당내 증재파 의원들은 금명간 거취에 대해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이날 안 대표와 오찬을 하며 “전당대회 전 사퇴” 증재안 수용을 최종 압박한다. 한 증재파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오늘 중엔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증재파의 고심도 여간 깊지 않다. 안 대표가 증재안을 수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신당을 지지하기엔 명분이 약하고 민주평화당에 합류하기엔 아직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다. 한 증재파 의원 측은 “당에 남으면 배신자 소리를 듣게 되고, 새 동지를 틀기엔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토로했다.



MB 수사, 공소시효 코 앞인데 ‘평창올림픽 변수’...검찰 신중

일각 올림픽 후 소환 예측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거 소환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는 있지만 계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국가적 행사인 평창동계올림픽이 있어 수사가 다소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는 총 네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다스·국정원 특별비·민간인 사찰·군사이버공작 등 수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명박 정부 국정원 특수활동비 및 민간인사찰, 국정원수사팀은 군 사이버공작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다스 관련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서울동부지검에 구성된 특별수사팀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수사는 검찰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 의혹의 경우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알려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78)이 계속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가, 장석명(54)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태다.

게다가 주요 인물인 이상득 전 의원이 병환을 이유로 정상적인 조사를 받지 않으면서 워선으로 뺀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8일 검찰에 출석했지만, 병환을 이유로 4시간만 귀가했다. 이 전 의원은 비교적 짧은 시간 진행된 조사 과정에서 나이,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외에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스 관련 조사도 마찬가지로, 동부지검 수사팀은 다스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120억원이 직원 개인의 횡령인지, 아니면 실소유주의 지시로 만든 비자금인지를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데 관련자들이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다소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의 다스 관련 조사 역시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등 주요 인물 조사가 남아 있어 이 전 대통령을 끝내로 겨누기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시형씨는 이 전 대통령 소환 전에 거쳐야 할 주요 인물로 꼽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부자가 다스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취지의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가 실소유인 이 전 대통령을 등에 업고 다스 운영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것이다. 이씨에 대한 조사가 이 전 대통령 소환의 ‘전 단계’로 여겨지는 이유다.

평창동계올림픽이 코 앞이라는 점도 부담이다. 평창올림픽은 다음달 9일 개막해 같은 달 25일까지 진행된다. 30년만에 우리 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인데다가, 첫 남북단일팀이 구성돼 세계에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보내는 지구촌 축제로 추진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평창올림픽을 유치한 이 전 대통령이 정작 행사를 앞두고 검찰 조사를 받는다면 모양새가 사나울 수 있다. 청와대가 이 전 대통령에 평창올림픽 초청장을 보내기로 결정한 부분도 검찰 수사에 부담 중 하나다.

홍준표, 추미애 향해 “盧탄핵 원죄 벗어나려 野공격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9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헌 노무현 정부 2기 정권의 대표로서 지난 노무현 1기 탄핵 때 찬성했던 원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줄을 알지만 제야당 대표를 터무니없이 흠집 내는 것만으로는 희석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을 상대로 정치해이지 야당 비난에 집중하는 것은 그 원죄를 더욱 깊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지난 26일 오후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당의 내각 총사퇴 주장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직전의 이곳 행정 최고 책임자가 누구였는지도 한번 봐야겠다”고 전직 경남지사인 홍 대표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홍 대표는 “나는 민주당 대표를 내 기억으로는 대놓고 비난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오히려 칭찬

한 일은 있다. 그것이 최소한의 정치도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민주당이 급락하는 시점에 밀양참사가 발생하니 오죽했으면 전직 (경남) 도지사였던 나의 책임까지 운운하겠냐”고 지적했다.

한편 추 대표는 2004년 당시 새천년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조순형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민주당 당론으로 ‘찬성’이 결정되자 입장을 바꾼 바 있다.



스마트폰에서 검색해보세요!

(주)에이치엔프레스 검색

자연석/호박돌/간판석/판재석/조경용석재 등 석제품의 모든 것

광주 전남 석제품 전문

저희 (주)에이치엔프레스는 석제품전문대량판매 및 납품전문업체로서 자연석, 호박돌, 간판석, 판재석, 조경용 등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TEL : 062-224-5800 H·P : 010-5448-8868

“무료상담환영”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